

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

1. 검토배경

- 2.25 중대본 보고한 “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” 조치실적 점검을 통해 강화방안 이행을 독려하고 코로나 4차 유행 억제 도모
 - 특히, 무관용 원칙 적극 적용토록 처분대상 위반유형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혼란 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

2. 방역수칙 위반 時 처분근거 현황

- (“20.8.12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법 49조제1항제2호의2~4, 제83조제2항·제4항 신설)
 - (방역수칙 준수 명령) 다중이용시설 운영자·이용자, 운송수단 이용자, 감염병 우려 지역 등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
 - (과태료) 위반시 사업주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
- (“20.9.29) 방역수칙 미 준수 사업장에 폐쇄 또는 운영중단(3개월 이내)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법 49조제3항 신설)
- (“21.2.25) “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” 중대본 보고

【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】

- ① 무관용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
- ② 경제적 지원 제외 (재난지원금, 생활지원금, 손실보상)
- ③ 구상권 (손해배상청구권) 적극 행사
- ④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
- 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홍보 강화

3. 이행력 강화방안 세부과제 및 조치현황

①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

- 2.25.~3.21.간 지자체 처분은 총 9,677건, 그 중 7,281건(75.2%)은 경고 또는 계도, 2,396건(24.8%)은 과태료 등 처분 실시

구 분	계	경고·계도	과태료	영업정지	집합금지	고발
계 (%)	9,677 (100)	7281 (75.2)	2,110 (21.8)	2 (0.02)	88 (0.9)	196 (2)
사업자 (%)	7,425 (100)	6598 (88.9)	568 (7.6)	2 (0.03)	88 (1.2)	169 (2.3)
이용자 (%)	2,252 (100)	683 (30.3)	1542 (68.4)	-	-	27 (1.2)

* '21.1.20~3.16 기간 경찰청 수사 2,676건 중, 사건종결 2,181건(기소 1,963, 불기소 218) 및 수사중 495건

○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(3.26~4.16.)

* (현행) 경고 →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
(개선)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

② 경제적 지원 제외

○ (재난지원금 ^{중기부·고용부}) 사업공고문(소상공인 버팀목자금, 재난지원금)에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

○ (생활지원비 ^{질병청})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(3.29.)

○ (손실보상금 ^{복지부})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고시 발령(3.24)

* 세부 절차 안내를 위한 사업안내 지침 개정 중

③ 구상권 (손해배상청구권) 적극 행사

○ (소송) 7개 지자체* 및 건보공단에서 총 14건 소송중(소송가액 약 1,068억원)

* 서울, 대구, 광주, 울산, 경남, 충북, 제주

○ (협의체) 법무부·중수본·방대본 및 지자체 등 총 17기관* 참여중

* 법무부, 중수본, 방대본, 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강원, 경남, 충북, 충남, 전남, 제주, 건보공단, 정부법무공단

○ (지침) “손해배상청구 매뉴얼” 작성·배포하였고,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및 법률자문 중 (법무부)

④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

○ 지자체 조치현황 파악(매일) 및 현장점검·조치실적 분석자료 중대본 보고(3.11.)

⑤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

- 사회적 거리두기 정례브리핑 (2.25., 3.8.), 보도자료(2.26., 3.26.), 공청회(3.5.) 등으로 적극 홍보
- 복지·교육·여가부, 금융위,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협회·단체와 협력 및 자율적 참여·실천 유도

【지자체 우수사례①: 대구시, ‘시민참여형 방역체계’ 강화】

- ▶(추진내용)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개최(22회)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, 7대 기본생활수칙 등 중요 방역지침과 정책을 토의·결정
☞ 상향식(Bottom-up) 의사결정 실시
- ▶(민·관 거버넌스)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(시민단체, 종교인 등 204명) 및 실무위원회(기관·단체 실무자 등 246명), 총괄방역대책단(감염병관리전문가 등 18명) 구성 및 각급 협회·단체(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76개) 등 참여

【지자체 우수사례②: 경북 포항시, ‘생활방역단·방역컨설팅단’ 운영】

- ▶(방역인원) 191명 (생활방역단 151(구청 10, 읍면동 75, 클린안심방역단 66) + 방역컨설팅단 40명)
- ▶(대상시설) 총 18,671개소 (식품·공중위생업소 14,441, 종교시설 655, 교육기관 252 등)

<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부처별·분야별 조치 현황>

【부처별 현황】

구분	계	복지부	질병청	법무부	행안부	중기부	고용부	경찰청	지자체	간접기관	기타
계	11*	2	2	2	1	1	1	1	2	1	1
완료	5	2	1	-	-	1	1	-	-	-	1
추진중	6	-	1	2	1	-	-	1	2	1	-

* 1개 과제를 2개이상 부처가 추진하는 경우 1개로 계산

【과제분야별 현황】

구분	계	무관용원칙	경제자유권 제외	구상권 행사	처분실적 관리	홍보강화
과제수	11	2	3	3	1	2
추진완료	5	-	3	-	-	2
추진중	6	2	-	3	1	-

4.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안

① 기본원칙

-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

- 처분권자(지자체)의 처분재량권을 존중하되, 지자체별 처분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처분 대상 중심으로 권고기준 제시

② 세부 권고안

① 과태료 처분

- * (과태료) 영업자 300만원 이하, 개인 10만원 이하 (벌금) 300만원 이하
- (과태료)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,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, ③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
- *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가능

【핵심 방역수칙 (붙임2)】

- (사업주) ①이용인원 준수, ②영업시간 준수,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, ④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
- (이용자) ①마스크 착용
- ※ 시설종류별 핵심방역 수칙 별도 추가

②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조치

- (집합금지) 아래 사항으로 감염우려가 높은 경우 적극적 집합금지 처분 실시
 -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,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,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
- (영업정지)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(3.26~4.16 입법예고 중) 후 적용
 - * (현행) 경고 →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
 - (개선)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

③ 벌금 부과 (고발)

-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적극적으로 벌금 부과(고발)

5. 협조요청

- (지자체)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 처분 실시
- (각 부처) 소관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시설 구분	사업주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	이용인원 준수, 이용시간 내 운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	마스크 착용 준수
유흥시설	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홀에서 노래 시 아크릴판 설치 클럽,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	전자출입명부 작성
콜라텍·무도장	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	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음식섭취 금지
홀덤편	전자출입명부 의무화	전자출입명부 작성
종교시설	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	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참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
PC방	음식섭취 금지(‘ㄷ’자 칸막이 시 제외) 안내	음식섭취 금지(‘ㄷ’자 칸막이 시 제외)
목욕장업	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안내	발한실 이용인원 준수 음식섭취 금지
전시회·박람회 마사지업·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카지노, 이미용업 오락실·멀티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박물관·미술관 실외체육시설	식당카페 등 부대시설, 음식 섭취 허용 구역(별도 게시)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	식당카페 등 부대시설, 음식 섭취 허용 구역(별도 게시) 외 에는 음식섭취 금지
학원·교습소·직업 훈련기관	(가숙형) 입소 전 선제적 진단검사 조치 등(2단계) (관악가·노래·연기) 칸막이 안에서 노래·연주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	음식섭취 금지
식당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	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결혼식장)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 칸막이 설치	-
영화관·공연장	(공연장) 폐창 및 육성응원 금지 안내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	(공연장) 폐창 및 육성응원 금지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
경륜·경정·경마	응원, 소리지르기 금지 안내 경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	응원, 소리지르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
스포츠경기(관람)장	합성, 응원 금지 안내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	합성, 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
숙박시설	파티를 위한 객실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금지	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음식 제공 금지 음식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안내	음식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

* 음식섭취 금지 시설이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과 시설 내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(별도 게시)에서는 음식섭취 가능, 물 또는 무알콜 음료 섭취는 모든 시설에 허용

시도	계	경고·지도	과태료	영업정지	집합금지 (원스톱아웃)	고발
계	9,677	7,281	2,110	2	88	196
서울	139	6	65	2	39	27
부산	139	25	94	0	20	0
대구	303	288	15	0	0	0
인천	3,144	2,803	282	0	0	59
광주	53	0	53	0	0	0
대전	1,687	1,654	3	0	0	30
울산	886	454	406	0	1	25
경기	2,364	1,698	609	0	20	37
충북	2	0	1	0	1	0
충남	58	0	44	0	0	14
전북	139	0	136	0	0	3
전남	330	263	66	0	0	1
경북	8	0	2	0	6	0
경남	160	18	141	0	1	0
강원	170	6	164	0	0	0
제주	70	65	5	0	0	0
세종	25	1	24	0	0	0

소 제기 주체	일시	소 제기 상대방	내 용
서울특별시	'20. 03. 23.	신천지 예수교회 (공동피고 이만희)	○ 교회 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, 방역업무 방해, 서울시의 치료비 부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소가 2억100만 원)
	'20. 09. 18.	사랑제일교회 (공동피고 전광훈)	○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소가 46억2,000만 원)
	'20. 12. 31.	성석교회 (공동피고 편재영)	○ 교회 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관련 손해배상청구(소가 2억100만 원)
대구광역시	'20. 06. 18.	이만희 (공동피고 신천지 예수교회)	○ 교회 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, 방역업무 방해, 대구시의 치료비 부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소가 1,000억 원)
광주광역시	'20. 09. 29.	장**	○ 역학조사 동선 고의적 누락·은폐으로 확진자 입원치료비, 자가격리, 진단검사 비용 등 구상권 청구(소가 1억8,300만 원)
	'20. 12. 16.	최**, 황**	○ 역학조사 동선 고의적 누락·은폐으로 확진자 입원치료비, 자가격리, 진단검사 비용 등 구상권 청구(소가 1억800만 원)
울산광역시	'20. 09. 08.	울산 70번, 88번	○ 증상 발현 후 외부활동, 자가격리 위반 (소가 1억 원)
	'21. 01. 26.	울산 762번	○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및 대면예배 금지기간 중 대면예배 강행(소가 1억 원)
경상남도 (창원시)	'20. 08. 31.	창원 51번	○ 확진자 입원치료비, 접촉자 자가격리, 진단검사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(소가 3억 원)
충청북도 (청주시)	'20. 11. 19.	김**	○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구상권 청구(소가 5,200만원)
제주 특별자치도	'20. 03. 30.	미국 유학생 모녀	○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활동, 방역 수칙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소가 1억3,000만 원)
	'20. 07. 09.	안산시 황**	○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제주도 내 온천 방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(소가 1억3,000만 원)
	'20. 10. 22.	목사 부부	○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(소가 1억2,000만 원)
국민건강 보험공단	'20. 9. 25.	사랑제일교회 (공동피고 전광훈)	○ 거짓자료 제출, 역학조사 방해, 집합제한 조치 명령 위반 등으로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(80%)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(소가 5억 6,000만원)

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(중기부)
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시행 공고(1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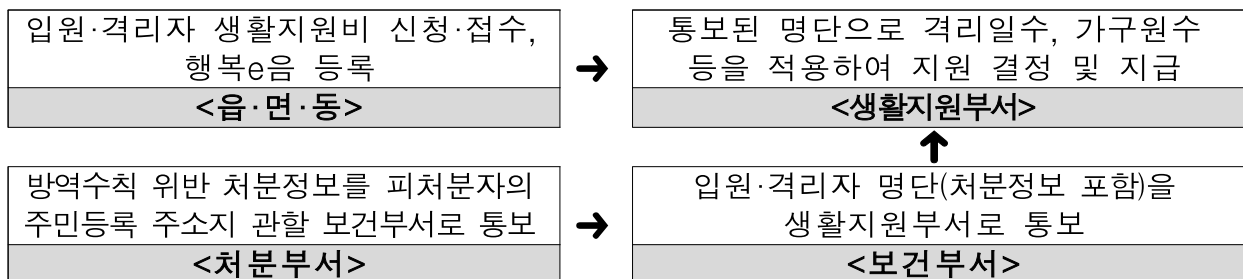
2. 지원 내용

- ②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·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*·지자체**가 '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
 - * 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
 - *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
 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□ 생활지원비(질병청)

* '21.4.1. 격리자부터 적용, 방역수칙 위반은 당해 격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

< 생활지원비 지원 행정절차 >



과제명	소관부처
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	지자체, 경찰청
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	질병청
재난지원금	중기부, 고용부
생활지원비	질병청
손실보상금	복지부
구상권 적극 행사	지자체, 건보공단
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	법무부
구상권 청구기준 및 매뉴얼 마련	법무부
정기적 처분 및 조치 실적 관리	행안부
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홍보	복지부
협회·단체 협력 및 자율적 참여·실천 유도	각 부처